법체계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의 차이

정 한 욱 연구원 (jhwook@cgs.or.kr)

▶ 2017년 4월, 기업이 속한 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차이가 존재함을 밝힌 논문이 미국 Journal of Finance에 게재됨

▶ 이 논문에 따르면, 대륙법 체계 국가에 속한 기업들의 CSR 수준이 영미법 체계 국가에 속한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, 또한 CSR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바탕으로 한 유사실험(Quasi-Natural Experiments)을 통해 대륙법 국가의 기업들은 영미법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사건 발생 후 CSR활동에 더 투자하는 경향을 보여줌

▶ 이러한 법체계에 따른 CSR 활동의 차이는 CSR에 대한 사회적 선호에 따른 반응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

검토 배경

□ Hao Liang과 Luc Renneboog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(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, 이하 CSR)과 각 국가 법체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Journal of Finance에 게재함[2)]

○ 114개국 23,000여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등급을 이용하여, 국가의 법체계가 CSR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함

□ 기존의 연구들은 CSR 활동에 속하는 특정 유형과 기업가치의 연관성에 대한 기업 단위의 분석이 주를 이룸

○ 주로 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만족도, 환경보호 및 사회공헌활동 등 CSR의 구성 요소들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임

○ 하지만, 국가 간 CSR 활동 정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함

□ 이 논문은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의 법체계에 초점을 맞추어, 한 국가의 법체계가 CSR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함

○ 대륙법이 이해관계자 중심의 법체계라면 영미법은 주주보호에 더 초점을 맞춘 법체계라는

2) Liang, H. and L. Renneboog, 2017, "On the foundation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", The Journal of Finance, 72(2), pp.853-910

점에서, 법체계의 차이가 CSR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

○ 또한, CSR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발생하면 이러한 수요에 맞춰 기업들은 반응하게 되는데, 특히 이해관계자 중심의 대륙법 체계 국가의 기업들은 수요 미 충족에 따른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영미법 체계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CSR 활동을 보다 많이 할 것이라 가정함

실증자료

□ 실증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(MSCI)의 Intangible Value Assessment(IVA)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IVA 등급임[3)]

○ MSCI IVA 데이터베이스는 MSCI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ESG 활동을 평가하여 기업별 CSR 수준을 등급 데이터로 제공함

- MSCI의 IVA 등급 자료는 환경과 사회평가의 가중치가 높아, 지배구조요소에 따른 내생성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음

○ 등급은 7등급(AAA, AA, A, BBB, BB, B, CCC)으로 구성되며, 본 논문에서는 최상위 등급인 AAA등급을 6점, CCC등급을 0점으로 환산하여 사용함

□ La Porta, Lopez-de-Silanes, and Shleifer(2008)[4)]의 분류에 따라, 국가별 법체계를 영미법(English Origin), 프랑스 대륙법(French Origin), 사회주의 법(Socialist Origin), 독일 대륙법(German Origin), 스칸디나비아 대륙법(Scandinavian Origin) 다섯 개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함

〈표 1〉 법체계별 특징 및 주요 적용국가

구분	특징	적용국가
영미법	역사주의를 바탕으로 한 판례법과 관습법을 근간으로 하는 법체계	영국, 미국, 캐나다, 오스트레일리아
프랑스 대륙법	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법전의 영향을 받아, 개인의 자유, 재산권 존중 및 계약의 자유를 기본원리로 함	프랑스, 스페인, 포르투갈
독일 대륙법	로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, 프랑스 대륙법과 유사하나, 보다 더 논리체계적인 특성을 가짐	독일, 일본, 대한민국
스칸디나비아 대륙법	프랑스 및 독일 대륙법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는 법체계	노르웨이, 핀란드, 스웨덴
사회주의 법	사회주의 통치국가에서 적용하는 법체계로, 마르크스 및 레닌주의에 입각	러시아, 중국, 폴란드

* 출처 : La Porta, Lopez-de-Silanes, and Shleifer (2008)

3) 1999년부터 2014년까지 MSCI IVA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전 세계 기업들의 IVA 등급을 사용하였으며, 2011년부터 평가 항목이 변경됨

4) La Porta, R., Lopez-de-Silanes, F., and Shleifer, A., 2008, "The economic consequences of legal origins", 「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」, 46(2), pp.285-332

기업의 IVA 등급 분포

□ 다섯 개의 법체계 중에서, 대륙법 체계 국가의 기업들이 영미법 체계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평균 IVA 등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○ 스칸디나비아 대륙법 체계 국가의 기업들은 통합 · 환경 · 사회 · 지배구조 등급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았으며, 영미법 체계 국가의 기업들은 대륙법 체계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평균 등급이 낮게 나타남

〈표 2〉 법체계별 평균 CSR등급 현황

구분	영미법	프랑스 대륙법	사회주의 법	독일 대륙법	스칸디나비아 대륙법
통합 IVA 등급	2.65	3.15	1.77	2.98	3.83
통합 IVA 등급(1999~2011)	2.72	3.10	1.26	2.83	3.93
통합 IVA 등급(2011~2014)	2.64	3.16	1.81	3.02	3.79
환경등급(1999~2011)	2.65	2.92	1.20	3.59	3.88
환경등급(2011~2014)	4.68	5.48	4.07	5.17	5.63
사회등급(1999~2011)	2.75	2.99	1.40	2.84	3.85
사회등급(2011~2014)	4.55	5.22	3.67	4.83	5.45
지배구조등급	5.42	5.58	3.89	5.49	6.66

* 출처 : Liang and Renneboog (2017)

CSR 정도와 법체계의 연관성

□ 본 논문에서는 다중회귀분석 및 프로빗(probit) 분석 등을 통해 법체계에 따른 CSR 수준의 차이를 분석함

○ 다중회귀분석에서, 종속변수로는 〈표 2〉의 수치화된 IVA등급을, 독립변수로는 다섯 가지 법체계 중 사회주의 법체계를 제외한 네 가지 법체계를 사용함[5)]

□ 회귀분석 결과, 대륙법 체계 국가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영미법 체계 국가에 속한 기업들에 비해 CSR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○ 대륙법 체계 국가의 기업들은 영미법 체계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평균 CSR 수준이 7~14%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

○ CSR 활동에 대한 수요 주체가 이해관계자라는 점을 감안하면, 대륙법 체계 국가에서 기업들이 CSR 수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영미법 체계 국가에 비해 CSR 활동이 보다 증가하게 됨

5) Liang and Renneboog (2017)에 따르면, 독일 대륙법, 프랑스 대륙법, 스칸디나비아 대륙법을 더미변수(Dummy Variable)로 적용하였으며, 각 대륙법 더미변수가 0인 경우에는 영미법 국가로 기준을 정함

유사실험(Quasi-Natural Experiments)을 통한 CSR과 법체계

□ 이 논문에서는 CSR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적인 사건들을 바탕으로 한 유사실험(Quasi-Natural Experiments)을 통해, 국가 간 법체계의 차이에 따라 CSR 투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

○ 2004년 태국 쓰나미 사고, 2008년 중국 멜라닌 우유 사태, 2010년 멕시코만 원유 유출사고 전후로, 법체계에 따른 CSR 투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

□ 세 건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유사실험 결과, 대륙법 체계 국가의 기업들은 사건 발생 후 영미법 체계 국가의 기업들보다 더 많은 CSR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

○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, 대륙법 체계 국가에서 CSR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고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업들이 CSR 활동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음

결론 및 시사점

□ 대륙법 체계 국가에 속한 기업들은 영미법 체계 국가에 속한 기업들에 비해 CSR 수준이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며, CSR과 관련된 사건 이후에 CSR 투자 규모를 더 늘리는 것으로 밝혀짐

□ 이는 CSR 수요 측면에서 주주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영미법 체계 국가에 비해 이해관계자 중심의 대륙법 체계 국가에 속한 기업들이 CSR 수요 증가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

○ 게다가 대륙법 체계의 국가에서는 주로 규제기반 메커니즘을 통해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요소를 훼손시키는 기업의 행위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조성되어 있음

□ 본 논문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

○ 추후에 동일한 법체계 하에서도 각 국가들의 규제 등에 따라 CSR 활동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
○ 국가의 법체계가 CSR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CSR활동과 관련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규범 등을 제정함에 있어 국가별로 상이한 법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